PPT0 발표 제목

PPT1. 용대표 약력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기본소득당 상임대표이자 제21대 국회의원 용혜인입니다. 이번 제22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대회 공동조직위원장 역할도 맡고 있습니다.

전세계에서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이렇게나 많은 분들이 참석해주신 이번 대회에 발표할 수 있게 되어서 참으로 영광스럽습니다.

오늘 제 발표의 제목은 대한민국 기본소득 정치의 도전과 과제입니다. 원래는 지난 7년동안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다양한 파일럿 실험들, 지자체 차원의 범주형 기본소득, 그리고 저와 몇몇 의원들이 발의한 기본소득 법안, 마지막으로 정당, 시민사회의 기본소득에 대한 입장의 변화들을 소개하는 것으로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다양한 개별세션에서 관련한 내용들이 충분히 소개되고 또 토론된다는 것을 확인하고, 오늘은 조금 더 깊숙한 고민들을 전하고자, 조금 더 예각화된 주제에 대해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중장기적으로 전 지구적 기본소득 도입을 통한 거대한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국가적 차원에서조차 현실로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각국의 구체적인 상황을 기반으로 더욱 다양하고 유연한 정치적 전략을 고민하고, 이를 수행한 성취들을 함께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 또한 한국의 조건을 고려한, 2023년 현 시점의 대한민국 기본소득 정치와 운동의 전략에 관한 것입니다. 저의 발표가 한국의 기본소득 운동가, 정치인들을 모두 대표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기본소득 정치의 최선두에 서 있는 기본소득당의 지난 수년간의 고민을 담아서 말씀드리는 것이라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드릴 핵심 키워드는 바로 한국 재분배 정치의 한계적 상황입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현재 한국의 기본소득 정치는 재분배 정치의 연장선으로 맥락화되어 배치되어 있는데, 이것이 효과적인 전략인지, 더 나아가 기본소득의 현실화를 위해서 대한민국에서 기본소득이 어떤 영역으로 배치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담은 발표입니다.

PPT2. 한국의 재분배 현황

먼저 OECD와 G7국가들과 비교한 한국의 재분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PPT3. 조세와 공적 이전의 재분배 기능 미미

간단한 수치들 몇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조세와 공적 이전 전후의 지니계수 변화에 관한 표입니다. 맨 위가 OECD평균이고, 가운데가 G7국가들의 평균이고, 한국이 가장

아래에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한국은 조세와 공적이전 소득의 역할이 극도로 미미한 국가입니다. 시장소득 불평등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지만, 조세와 공적이전 이후에는 불평등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한국은 이처럼 재분배라는 것이 거의 작동하지 않는 국가입니다.

PPT4. 국민부담률과 사회복지지출의 괴리 1번 표

이번 표는 국민부담률을 OECD와 G7국가들과 비교한 표입니다. 국민부담률이란 조세부담률과 사회보장부담률을 합한 값입니다. 1990년부터 2019년까지 각 10년을 기준으로 평균을 냈습니다. 보시듯이, 한국이 약 30년 동안 18%에서 24%까지 약 30%가량이 증가한 것은 맞지만, 여전히 OECD평균, G7평균보다는 한참 수치가 낮습니다.

PPT5. 국민부담률과 사회복지지출의 괴리 2번 표

다음표는 사회복지지출을 비교한 표입니다. 사회복지지출은 공공사회복지지출과 법정민간지출을 합한 값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OECD와 G7은 안정화되어 있는 상황이고, 한국은 조금씩 상승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PPT6. 국민부담률과 사회복지지출의 괴리 3번 표

두 가지 지표를 다시 비교가능한 최신년도 값으로 격차를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의 사회복지지출비율이 국민부담률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7%입니다. 이것은 G7의 73%와 크게 비교됩니다. 부담 대비 수혜의 상대 비중이 매우 낮다는 뜻입니다. 즉 낸 만큼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점을 한국의 매우 큰 조세 저항의 중요한 원인으로 추정합니다.

최근 대한민국의 국민부담률과 사회복지지출이 증가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는 집권세력의 정책 기조의 변화의 반영이라기보다는 경제 성장, 저출산 고령화 등에 따른 자연 증가의 성격이 강합니다.

PPT7. 생산성 증가율을 따라잡지 못하는 복지 수혜 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수치를 살펴보겠습니다. 생산성 증가율에 관한 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한국의 생산성 증가율은 최근 둔화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최근 10년동안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위의 내용들까지 종합해서 살펴보자면, 생산성 증가에 상응하는 수준의 복지 수혜가 계속 지체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요약하자면, 생산성은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데, 여전히 정부의 재분배 역할은 적극적으로 수행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PPT8. 한국 재분배 정치의 한계

1) 구조적 장벽들
2) 당면한 정치적 난제

이와 같은 상황의 구조적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현 시점 재분배 정치가 마주한 정치적 난제들은 무엇인지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PPT9. 구조적 장벽들
- 반공주의의 유산
- 역사적 저부담 체제
- 부동산 불패 신화
=> 재분배 정치의 허약한 대표성

여기 계신 한국분들은 다 경험해보셨을 텐데요, 외국에 나가면 늘 질문 받습니다. 남한이야? 북한이야? (웃음웃음) 다들 아시듯이 한반도는 분단상태입니다. 냉전과 함께 시작되었던 열전, 사실상의 제3차 세계대전이었던 한국전쟁은 한반도의 분단 상태를 폭력적이고 항구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70여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70년 동안 한국 사회는 반공주의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강도가 약해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반공주의는 한국사회의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여전히 분배 혹은 재분배를 요구하면 곧 공산주의와 동일시하는 분위기가 존재합니다. 기본소득과 연계해서 이야기하자면, 기본적으로 조세는 재분배와 직접적으로 연계된다기 보다는 정부를 통해 간접적인 방식으로 일부만 불투명하게 재분배와 연결됩니다. 그런데 조세형 기본소득은 부담-수혜의 관계가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방식입니다. 그러다보니 재분배에 우호적이지 않은 반공주의적 여론은 특히나 조세형 기본소득에 더욱 반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역사적으로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뤄낸 수출 중심의 경제 시스템 자체가 저부담 조세 체제였다는 사실입니다. 대한민국은 수출 주도 성장 전략에 따라 수출 상품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저부담 체제를 확립해 왔습니다. 1998년 IMF 이후에는 신자유주의 감세 기조와 결합되어 저부담 체제가 더욱 고착화되었습니다. 고부담 조세 체제에 가장 큰 저항자인 대기업의 막대한 영향력으로 복지 재분배를 위한 증세를 반대하는 여론은 여전히 강력합니다. 민주화 이후 노동조합의 권리가 정상화되며, 소수의 대기업에서 기업 복지가 상당한 수준으로 수립되긴 했습니다만, 동시에 그러한 개별 기업의 분배에서의 성취가 곧 재분배정치의 확장으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기업의 여력을 고려하며 분배에서 일부 양보하되, 사회 전반의 재분배에서는 몫을 정확히 지켜낸다’ 개별 대기업의 입장에서 보자면, 참 효과적인 경영방침이었던 것 같습니다.

유럽의 경우 복지국가를 위한 조세국가의 수립 이후 국민부담률에서는 큰 변동없이 누가 얼마의 비중으로 부담하는가에서만 변화가 있었다면, 한국의 경우에는 저부담에서 중부담으로 나아가는 과정 자체에 강력한 저항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즉, 조세 부담과 수혜를 직접 연결짓는 기본소득 홍보 전략만으로는 역사적으로 형성된 저부담 - 수출주도 성장의 경험을 돌파하기에는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고 평가합니다.

다음으로는 집약된 근대화로 인한 특정한 자산 증식 방식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최근까지도 주택과 토지 등 부동산 자산 보유가 자산 증식의 최대 통로였습니다. '부동산 불패 신화'라는 말까지 있습니다. 경제가 아무리 무너져도 부동산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전 국민적인 믿음입니다. 사실 부동산이 무너지면 곧 경제가 다 무너지는 구조이기에, 이는 사실에 부합한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자산 증식 방식은 당연히도 출발선에서 그리고 도착선에서 모두 불평등하지만, 부동산 개발이 매우 급속도로 진행되고 대규모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무작위적인 기회가 다수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또한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와 같은 사실상의 '자산 기반 사회보장체제'에서 부동산 재테크를 경험한 중산층들은 감세 운동의 든든한 배후지 역할로서 기능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에서도 다른 나라처럼, 부동산 말고도 비트코인을 비롯해 소위 '코인 열풍'이 불었습니다. 소득기반 안정성이 축소되고 있는 상태에서, 40대 이하의 상대적으로 투자할 자본이 적은 이들을 기반으로 코인 열풍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단기적으로 이와 같은 카지노 자본주의의 참여자 혹은 피해대중 또한 증세 정치의 동료보다는, 감세 정치의 배후지 역할을 하지 않겠나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구조적인 상황은 결국 재분배 정치 대표성의 허약함을 만들어냈습니다. 한국에서도 단순 여론조사에서는 증세와 재분배에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여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기득권 정당들은 감세-증세 기조를 놓고 논쟁하기보다는, 감세 기조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협력하며, 단지 감세의 크기와 대상을 놓고 대립하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거가 다가올수록 이러한 경향은 더욱 커집니다. 한국은 소선거구 단순다수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인데, 대략 2년에 한 번 큰 선거가 진행됩니다. '부동산 불패신화'와 동시에 지역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이기에, 늘 큰 선거는 '지역개발'이 중요한 과제로 제시됩니다. 자산이 많은 혹은 자산 증식을 시도할 수 있는 이들은 정치에 참여할 이유와 목표가 분명하기에 정치 고관여층이 될 확률이 높고, 이들의 영향력은 늘 과대대표됩니다. 결국 대다수의 개별적인 의원과 정당은 감세 정치를 반복합니다.

제가 21대 국회 전반기에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일했는데, 증세 안건이 한 두 건이라면, 대상과 폭이 미묘하게 조금씩 다른 감세 안건은 정말 수백 건이 쏟아지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대한민국 정치의 현실이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PPT10. 당면한 정치적 난제 - 전통적 복지국가운동진영의 반대 - 노동운동의 무관심 내지 암묵적 반대 - 결집된 조직 주체의 부재

이와 같은 구조적 장벽 위에, 기본소득 정치세력은 기성의 진보 진영과의 불편한 관계 또한 마주하고 있습니다.

간략히만 설명드리자면, 우선 전통적 복지국가운동진영은 재원 마련의 측면에서 기본소득과 전통적인 복지의 관계를 주로 제로섬 게임으로 파악하고, 기본소득 운동에 암묵적 혹은 명

시적 반대자로서 역할합니다. 예를 들자면, 최근 한국에서는 여당인 국민의힘의 김기현 대표가 휴가를 가면서, <기본소득 비판>이라는 책을 들고 가서 이슈가 되었는데요, 그 책을 쓴 분도 원래 민주당원으로 복지국가 운동을 열심히 해오신 교수님입니다. 그 분이 모두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통적 복지국가론자들이 기본소득을 비현실적인 요구라거나, 기존의 복지체제를 모두 무너뜨리려는 제안이라고 오해하는 경향은 분명합니다.

한편으로는 수십년째 저부담 체제가 중부담 체제로까지도 나아가지 못하는 현실을 살펴보면, 어떤 '현실적인 고민'이라는 측면에서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만, 동의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기본소득 그리고 전통적 복지영역, 공동의 확장을 위한 노력이 더욱 효과적일 텐데, 그것이 이뤄지지 못하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작년에 집권한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은 '약자 복지'를 기조로, 사회 전체 불평등의 축소보다는 '빈곤 개선'에 집중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주류 복지국가운동진영과 담론적으로 일정하게 공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윤석열 정부의 '약자 복지'가 결국에는 복지 자체의 축소를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그것을 반대하는 맥락으로 복지국가운동진영과 기본소득이 만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으나, 아직은 먼 관계라는 것은 말씀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노동운동 또한 기본소득에 대해 사실상 반대의 입장을 취합니다. 구조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산별 체계가 아닌 기업별 체계의 노동조합 질서 속에서, 오랫동안 한국의 조직 노동운동의 주력은 대기업 중심이었습니다. 대기업 중심 기업별 복지체제 하에서는 기본소득이 갈급한 요구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늘 개별적인 대기업과의 분배투쟁 즉, 임금인상, 고용보장이 더 절실한 투쟁의 요구로서 등장합니다.

물론 전반적으로는 대한민국의 노동권 보장 수준은 여전히 낮은 상태입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윤석열 정부가 노동 탄압을 공격적으로 감행하고 있다보니, 노동조합의 정치적 시민권의 존폐 자체가 위태로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상황이다보니, 더욱더 기존의 관성과 다른 강력한 재분배 확대 요구로서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국면이 등장하기 어려워질 것이라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는 한국 기본소득 운동의 오래된 난제인 주체 형성에서의 한계입니다. 저를 비롯해 기본소득당의 주요 당직자들은 대부분 오래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의 회원들입니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가 결의한 것은 결코 아니나 그 중 일부가 창당을 한 것이라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본소득당 창당과 원내 진입 그리고 확장은 그러한 점에서 중요한 시도이긴 할 것이나 여전히 미약한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단순 여론에서는 기본소득에 대한 우호적 평가가 유의미한 수준에서 존재하고 커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나, 그것이 곧 조직화된 주체라고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조직화된 주체의 부재는 기본소득 정치 운동의 확산에 뚜렷한 한계지점입니다.

현 시점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은, 기본소득 도입에 동의하는 대한민국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많은 국민들을 기본소득 도입 운동의 주체이자 동료로서 조직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는 점입니다. 또한 다양한 시민사회운동진영의 각 의제 영역들에 기본소득 도입에 동의하는 이들을 조직해내는 것 또한 여전히 중요한 과제일 것입니

다.

PPT11. 기본소득 정치운동의 새로운 전략 조세형 기본소득 운동을 넘어 -> 공유지분형 기본소득 운동으로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재분배의 현황과 재분배정치의 한계적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고민들 속에서 기본소득당과 제가 고민하는 기본소득 정치운동의 새로운 전략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은 슬로건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조세형 기본소득 운동을 넘어, 공유지분형 기본소득 운동으로 나아가자' 입니다.

'넘어' 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조세형 기본소득 도입을 포기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주로 재분배 정치의 영역으로만 국한되어 있던 기본소득 정치의 영역을 보다 확장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방향은 조세형을 공유지분형으로 옮겨가자, 또한 그 공유지분의 대상을 국가의 전략과 연결시키자는 제안입니다.

이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치러진 21대 대선에서 기본소득당의 오준호 후보는 2026년 생계급여 기준인 월 65만원의 충분한 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했지만 관심은 미미했습니다. 물론 기본소득당 자체의 정치적 영향력이 아직 미미하기도 하고, 또한 유력 후보였던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다양한 범주형 기본소득과 연 100만원이라는 도입 모델을 제시했기에 관심을 많이 받지는 못한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해당 선거를 경유하며 확인한 것은 증세 재원 모델이 아직까지는 현실감 있는 논쟁으로 진입하기에는 장벽이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이재명 후보는 증세 없는 기본소득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기본소득당은 이에 매우 비판적으로 평가하지만, 한편으로는 저성장의 시대에 한국의 기본소득 도입을 바라는 많은 이들의 고민이 또 한편으로 담겨있는 공약이었다고 평가합니다. 최선의 선의로 해석하자면, 고육지책이었던 것입니다.

선거시기 뿐만 아닙니다.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원내에서 탄소세와 토지세를 각각 재원으로 하는 기본소득 연계 증세 입법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여론에서나 정치권에서나 여전히 비중있는 대안으로 다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본소득 논자들이 지지하는 기본소득 도입 모델을 고려하면, 각종 세금 감면 폐지를 포함해 약 400조원의 실질 증세가 필요한 상황이고, 이는 국민부담률을 45% 이상으로 높여야 가능한 상황입니다. 저부담 체제의 한국이 단기간에 프랑스와 덴마크 수준의 국민부담률을 달성해야 가능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내적인 정합성이 있더라도 정치적 수용성이 떨어지는 것은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조세형 기본소득만으로는 한국의 재분배 정치의 구조적, 상황적 어려움을 돌파하기에 어려움이 크며, 그렇기에 새로운 전략을 시도해보아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공유지

분형 기본소득 운동의 확장은 새로운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재원 모델로서 공유지분형 기본소득은 한국 재분배 정치의 구조적 한계를 돌파하는 데서 조세형 기본소득보다 수월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PPT12. 공유지분형 기본소득 선순환 고리 인내자본으로서 투자국가의 적극적 산업정책 & 지분권에 기초한 배당 & 혁신 성장 => 에너지 전환, 디지털 전환 가속화 & 공유 사회 진입

저와 기본소득당이 고민하는 공유지분형 기본소득은 ‘인내자본으로서 투자국가의 적극적 산업정책’, ‘지분권에 기초한 시민배당’, 그리고 이를 통한 ‘혁신 성장’ 등의 개념을 정책요소로 합니다.

또한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공유지분의 대상을 전략적으로 특정하자고 제안합니다. 2023년 현재, 국력을 모아 대응해야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역시나 기후재앙 대응입니다. 이를 위한 최소한의 노력은 당연히도, 신속한 에너지전환일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첨단 디지털 산업을 기반으로 한 기술 경쟁이 지경학적 위기, 또한 국제안보위기로 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첨단 산업에 대한 기술력을 확보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당이 제안하는 공유지분형 기본소득은 이러한 복합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추동하는 것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해당 위기 대응 자체가 너무나 중요한 시점이기도 할뿐더러, 그 전환의 방향이 불평등을 가속화할 재벌 대기업의 성장과만 연결되어서도 안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로는 대한민국의 집약적 근대화, 산업화의 경험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국가 주도로 새로운 부를 창출하고, 이를 토대로 분배 과실을 공유한다는 서사. 그것이 바로 지난 근대화, 산업화가 대한민국 국민들의 기억에 새긴 서사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기의 근대화, 산업화가 성과를 개별 노동자의 임금으로 분해하는 개별 기업과 노동자 중심의 서사였다면, 이번의 변화는 정부를 매개로 전체 시민으로 그 성과가 배분된다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저는 이러한 친화성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재분배 정치의 확대만을 통한 기본소득 도입보다 훨씬 대중적 호소력이 높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또한 부과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조세를 재원으로 할 경우 경제 상황과 정치 상황에 따라 제도의 안정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비판이 종종 제시되는데, 공유지분형 기본소득은 공유자들의 ‘재산권’에 기초한 만큼 상대적으로 안정된 권리로서 인식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시에 공유자의 재산권에 기반한 배당인만큼 그 규모 자체가 중요한 쟁점으로 등장하지 않게 될 것이기도 합니다.

물론 충분한 기본소득 도입을 통한 노동 등 강제적 상황 전반으로부터의 해방, 실질적 자유의 도입 등은 여전히 견지해야할 목표겠으나, 복합적 위기 대응의 시급성과 국가적 기본소득 도입의 불가역성을 고려한다면, 도입 전략으로서는 공유지분형 기본소득이 현 정세에서

탁월한 전략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요약하자면, 공유지분형 기본소득을 기본소득 도입 운동의 중요한 흐름으로 조직하여, 조세형 기본소득 운동이 안고 있는 증세 정치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입니다.

한국에서 지난 7년 동안 기본소득 운동, 기본소득 정치가 확대되면서, 매우 고무적인 일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자체 차원의 다양한 기본소득 도입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 한 흐름이 바로 지역의 다양한 공유부에 기초한 배당형 정책의 도입입니다.

이번 대회에서 발표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 신안군의 사례는 매우 유의미합니다. 신안은 햇빛연금, 바람연금이라는 이름으로 태양광발전, 해상풍력발전과 시민배당을 결합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자체 모델을 다른 지자체로 확대하는 운동, 그리고 이러한 지자체에 대한 중앙 정부의 예산 및 입법을 지원 강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운동이 될 것입니다. 동시에 신안을 넘어, 대한민국 전체를 공유 사회로 만들자는 정치적 제안과 홍보를 이어가는 것 또한 당장 수행되어야할 우리의 과제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PPT13.

공유지분형, 공동소유형 기본소득은
사회적, 생태적 전환의 핵심 동력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유지분형 기본소득 혹은 공동소유형 기본소득의 의의를 조금 더 진취적으로 표현하자면, 저는 결국 기본소득 운동은 21세기의 새로운 공유화, 사회화 운동이자 대안사회 건설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만 남아버려 대다수 시민들을 강제적 노동으로 배치할 뿐인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실패를 딛고, 국가와 당만이 남아버려 결국 대다수 구성원들을 강제적 노동으로 동원할 뿐인 현실사회주의의 실패를 딛고, 새롭게 나아가야할 대안 사회 운동이어야 합니다. 공유지분형, 공동소유형 산업을 전략적으로 특정하는 그 민주적 절차는 국가와 사회의 공통적 지향을 형성해 나가는 민주적 과정이 될 것입니다. 그것의 성과가 다시 사회의 구성원들 모두에게 동등하게 나눠지는 과정은 시민들의 공통성을 형성하는 과정이자 곧 결과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공유지분형 기본소득, 더 나아가 공동소유형 기본소득 정책이야말로 비록, 등장에서는 부분일 수 있지만, 결국 전 사회적인 전환의 핵심적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한국의 특수한 맥락을 고려한, 기본소득 도입 정치전략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저 뿐 아니라, 이번 대회에서 각 국의 특수성을 고려한 각각의 정치전략,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공유해야할 전략의 보편성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PPT14. 땡큐 페이지

이상으로 발표를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